

정보공개청구 답변

1. 그간의 연구 및 업무 성과 소명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25.10월)되었으며, 당정합의에 따라 先조직법 개정 - 後형소법 개정 등 2단계 후속조치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 이에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을 위해 두 차례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여 당·정간 긴밀히 숙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의 수사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며 수사기관은 수사에, 기소기관은 기소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이 26.3월 제정되었습니다.
-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기능과 권한을 기관 간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 국가적 범죄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자 보호라는 ‘국민 권익 보호’의 대원칙 아래 수사-기소 절차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 추진단은 릴레이 토론회(총 7회) 및 당·정 공동 토론회('26.5.6)를 개최하였으며,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열어두고 논의하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고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김민석 前 총리께서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TF회의 자료 및 기록 공개

○ 검찰개혁추진협의회 및 자문위 내용

- (추진협의회)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검찰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법제처 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총 28회 개최하였습니다.

일자	논의사항	주요 논의내용
제1차 (25.10.23)	검찰개혁 업무 추진방향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내 후속조치 완료 필요 → 매주 협의회 개최 예정 • 주요 쟁점에 대한 치밀한 검토 당부
제2차 (25.10.31)	검찰개혁 관련 쟁점 검토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행안부에서 쟁점 관련 통계·데이터 등을 마련해 공유
제3차 (25.11.06)	중수청 설치 관련 쟁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수사인력 확보, 중대범죄 수사역량 유지방안 등을 중점 검토
제4차 (25.11.14)	중수청 설치 관련 검토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절차를 함께 진행 • 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신속히 추진
제5차 (25.11.27)	중수청법 제정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안에 법안 마련을 위해 쟁점 논의 중요
제6차 (25.12.04)	중수청법 제정안 검토 공소청법 관련 검토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의견 당부, 이를 조율하여 법률안 반영
제7차 (25.12.11)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안 완성 과정에서 세밀한 접근 필요, 추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형소법 및 하위법령 논의시 치밀하게 검토
제8차 (25.12.31)	중수청법·공소청법 논의경과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쟁점 정리 • 입법예고에 앞서 당과 협의
제9차 (26.1.8)	중수청법·공소청법 입안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자단 간담회 실시 •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논의
제10차 (26.1.16)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 관련상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1.20)를 통해 당 의견을 수렴하고 중수청 조직구조 등 관련 쟁점 등 정리
제11차 (26.1.23)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결정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청 이원화 등 쟁점사항에 대한 당 의견을 전달 받아 정부안 보완여부 등 검토
제12차 (26.1.29)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결정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범죄수사청 임시 KICS 구축방안
제13차 (26.2.6)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입법예고안 관련 검토, 중수청 청사 구축계획
제14차 (26.2.12)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재입법예고 계획(안)
제15차 (26.2.27)	중수청법·공소청법 및 형소법 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법 관련 향후 입법 행정사항 추진계획, 보완수사권 등 형소법 쟁점 관련 의견수렴 계획,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16차 (26.3.5)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신설 및 훈령 제정 계획(행안부), 중수청 조직 설계 및 인력 충원 계획(안)
제17차 (26.3.13)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개혁 업무 추진현황, 중수청법 심의동향 및 개청준비단 진행상황(행안부), 법사위 법안 주요논의(법무부)
제18차 (26.3.27)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법 국회 통과 이후 향후 업무 진행 방향, 중수청 개청 준비단 추진상황 및 협조필요사항(행안부)
제19차 (26.4.2)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후보지 검토 및 향후계획
제20차 (26.4.10)	형사소송법 개정 및 중수청 청사 후보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관련 쟁점별 검토,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후보지 실사 결과 보고
제21차 (26.4.17)	공소청 및 중수청 직제 및 중수청 청사 후보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청 및 중수청 직제요구안 및 검토방향 • 중수청 분청 및 서울청 청사 후보지 검토
제22차 (26.4.23)	공소청 및 중수청 인력, 중수청 청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청 및 중수청 인력 검토방향 • 중수청 청사확보 방안 검토

제23차 (26.4.30)	공소청 및 중수청 인력	• 공소청 및 중수청 인력 검토
제24차 (26.5.7)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 형사소송법 관련	•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 행정 진행사항 • 형사소송법 개정논의 계획
제25차 (26.5.15)	중수청 출범관련	• 중수청 개청준비단 업무현황 및 로드맵
제26차 (26.5.26)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 형사소송법 관련	•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 행정 진행사항 • 형사소송법 주요 쟁점 검토
제27차 (26.6.5)	중수청·공소청 관련	• 중수청 직제·임용령·시행령 제정 계획 • 관계법령 개정 추진계획
제28차 (26.6.18)	검찰개혁 추진상황 관련	•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중수청 청사 구축 진행상황

- (자문위원회)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27차례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사퇴한 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26.4.30)

일자	내용
’25.10.24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25.10.29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25.11.5	제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중수청 설계시 고려사항 ▲ 중수청 수사관 규정 ▲ 중수청 인사 관련 법률 규정방안 ▲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 구성방안
’25.11.11	제3·4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중수청 수사범위 ▲ 중수청과 타수사기관 수사 관할경합 해결방안 ▲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25.11.18	제5·6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중수청 수사인력 인사관리 방안 ▲ 중수청 민주적·행정적 통제방안 ▲ 중수청 수사지연 및 미개시 대비책
’25.11.25	제7·8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검사의 직무범위 논의를 위한 전제 ▲ 검사의 직무범위
’25.12.2	제9·10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검사의 직무범위 논의를 위한 전제 ▲ 검사의 직무범위
’25.12.23	제11·1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보완수사권 관련
’26.1.9	제13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공소청법, 중수청법 주요 내용
’26.1.20	제14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설치법안 쟁점 정리
’26.1.27	제15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보완수사권 관련
’26.2.3	제16·17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보완수사권 오남용 방지 주장 관련

'26.2.24	제18·19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
'26.3.3	제20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보완수사요구 제도 개선방안
'26.3.17	제21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향후 운영방안
'26.3.31	제2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검경 협력관계 논의(경찰 실무자 의견 청취)
'26.4.6	제23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검경 협력관계 논의
'26.4.14	제24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수사권 통제 관련(경찰 불송치 결정 통제 강화방안) ▲ 검사 실무자 의견 청취
'26.4.21	제25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기소권 통제 관련(재정신청제도 등) ▲ 국수본 실무자 의견 청취
'26.5.12	제26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 및 사건의 종결체계 개편
'26.5.19	제27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형사소송법 주요쟁점 검토

○ 토론회 내용

- 토론회 개최는 아래와 같이 총 8회 진행하였습니다.

구분	일시	제목	주관
1	'25.12.8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
2	'26.3.11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 검찰개혁추진단
3	'26.3.16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
4	'26.3.27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5	'26.4.3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6	'26.4.8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찰개혁추진단
7	'26.4.15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추진단
8	'26.5.6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검찰개혁추진단

○ 연구용역 자료

- 검찰개혁 관련 해외사례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및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총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 회의비 및 세금집행 내역 공개

○ 예산집행 내역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6.25기준)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663	475	62	1,734	526
- 상용임금(110-03)	29	8	-	85	29
- 일반수용비(210-01)	150	146	-	648	16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	11	-	58	28
- 특근매식비(210-05)	28	1	-	83	2
- 임차료(210-07)	105	101	-	391	160
- 유류비(210-08)	2	0	-	-	0
- 복리후생비(210-15)	0	0	-	1	0.08
- 기타운영비(210-16)	4	4	-	15	10
- 국내여비(220-01)	52	2	-	156	10
- 사업추진비(240-01)	30	29	-	89	45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	26	-	78	26
- 직책수행경비(250-02)	34	26	-	95	46
- 일반연구비(260-01)	90	43	43	-	-
- 정책연구비(260-02)	40	18	18	-	-
- 민간이전(320-09)	3	1	-	10	2
- 건설비(420-03)	59	58	-	25	
합 계	663	475	62	1,734	526